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제 219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돌봄종사자 지위향상 조례 시급"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돌봄종사자 건강권 등 처우개선 주제 토론회

25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종합토론 진행 전 심의보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종합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성혜원 강사의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를 듣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25일 돌봄종사자 건강권 관리방안 및 처우개선 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관리방안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를 진행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도 내 사회복지시설 기 관 종사자 및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100여명이 함께하여 토론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토론회는 성혜원 전문강사(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와 장우심 교수(U1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돌봄종사자 건강권 관리방안 및 처우개선 연구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성혜원 강사의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대상자의 94.2%가 돌봄종사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종사자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는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23.2%,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가 20.6%로 나타났다.

장우심 교수는 돌봄종사자의 건강문제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으로는 69. 6%, 정서적으로는 53.5%, 사회적으로는 93.3%의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며 인간관계 개선, 의사소통의 실제, 사회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있어 1순위는 낮은 임금, 2순위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3순위는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심 교수는 결론에서 돌봄종사자 건강권 관리방안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충청북도 노인 및 장애인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심의보 회장(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 좌장을 맡아, 권임경 활동보조인(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양순 요양보호사(더조은요양원), 정찬연 관장(증평군장애인복지관), 송유정 대표((주)휴먼케어)의 토론을 통해 청중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충청북도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건립필요
활동보조인 근무중 겪는 신체·정서적 어려움과 고충토로
요양보호사에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복지혜택 더 늘려야
돌봄직원 근무환경 개선 위해 노동력 제공기관들 관심시급

종합토론에서 권임경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며 겪는 신체적 문제 및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최양순 요양보호사는 현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미흡함에 대한 개선사항을 언급했다. 정찬연 관장은 현재 돌봄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말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이며,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의 운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송유정 대표는 돌봄종사자의 건강권 관리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및 활동보조인 제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업 및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를 통해 현재 돌봄종사자들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하여 적극 논의해보겠다 라고 밝혔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심의보 회장은 돌봄종사자의 건강권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방안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돌봄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돌봄종사자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에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뜬다

시, 12대 투입 전화예약 운영

청주시가 7월부터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12대를 본격 도입한다.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첫 운행식이 3일 오전 9시 30분 국민생활관 앞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박종택 개인택시청주시지부장, 박상역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권영주 대한노인회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장, 한권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지난해부터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12대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매년 해피콜 등록인원은 연평균 16% 증가해 2016년말 3,723명을 기록했다. 또 운행건수도 연평균 4.6% 증가해 2016년말 109,072건을 기록했다.

이렇듯 매년 증가하는 이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 및 개인택시청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해왔다.

기존 교통약자 전용으로 특별교통차량 45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차량이 부족해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용신청이 몰려 차량 배차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그간 차량 부족 때문에 발생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방식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해피콜처럼 1일전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다.

이용요금도 해피콜 요금체계와 동일하다.

운영은 해피콜 위탁운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1588-8488)에서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1 2급)과 만 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 1~4등급) 어르신 중 비휠체어 이용자로서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장애인·고령자에 '일자리 드려요'

청주시-SK하이닉스 등 4곳 일자리 창출 공동노력 협약

장애인 사업장 '행복모아' 에 내년까지 100여명 고용할듯

이승훈(오른쪽 두번째) 청주시장이 11일 SK하이닉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장 애 인 고 령 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청주시가 SK하이닉스(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장애인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승훈 시장과 이일우 SK하이닉스(주) 청주경영지원실장,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이상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등은 11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주) 가 올 하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오는 2018년까지 장애인 100여 명을 고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청주시는 일자리 구 인 구 직 홍보 및 알선 등 행정 지원을, SK하이닉스(주)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속 확대 및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구직자 모 집 선 발 및 직무개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은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충북도에 7월내 인권전담부서 신설

만득이 유사사건 방지 위 해 장 애 인 여 성 등 69개과제 추진

충북도는 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운영 방침과 최근 만득이사건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인권유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중 팀단위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팀(가칭)에서는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비롯해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로 추진하는 인권업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자치행정과 내 도민소통팀에서 직원 1명이 인권업무와 병행해 과거사, 갈등예방, 분쟁조정, 도민참여, 직무발명 등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2013년 12월에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2014년 8월에는 15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를 설치했으며 2016년 2월에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을 수립했다.

도 자치행정과 내에 신설되는 인권팀 에서는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 에서 담고 있는 아 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건강, 주거, 문화, 환경, 노동, 인권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인권제도 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12개 부문 6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개인별지원계획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정보제공·서비스연계를 통한 맞춤형평생계획설계 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은?
- 장애등록이 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당사자
- 등록 발달 장애인 보호자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청 방법은?
- 주소지 주민센터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주민센터)
-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지원절차는?

권리구제사업

권리구제사업은?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현장조사·현장방문
-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시 형사·사법절차 지원

신고 후 처리절차

신고방법
- 권리구제 대표번호 ☎ 1522-2882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43)716-2160
- 경찰신고 ☎ 112

처리절차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 행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
-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점검 등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도 지원

지 원 절 차

1. 공공후견서비스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선정 | 시·군·구청
3. 후견인후보자 선정 | 시·군·구청
4. 후견심판 청구준비 | 시·군·구청 /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후견심판 청구 | 시·군·구청
6. 후견심판 | 관할 가정법원 등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09호 Tel. 043) 716-2160~2169 Fax. 043) 716-2130 www.broso.or.kr

"살기 좋은 충북 함께 그려요"

도의회 정책복지위, 보건복지국 등 업무상황 청취

"여성가족친화 · 아동 보호 · 장애인 정책 보완해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충북여성재단, 충북도립대학 등 7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영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6선거구)은 충북여성재단이 충북지역 여성정책 연구와 교육의 허브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지역의 여성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여성정책 개발과 체계적 지원, 여 성 가 족 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제도 연구 등을 타 시 도 보 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5선거구)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질의와 함께 복지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안정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은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아동상담사 1인당 이상적인 상담관리 아동수는 15명인데 비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아동수는 평균 48명으로 상담건수가 매우 많아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인력충원 계획 수립 및 실제 증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종규 의원(자유한국당, 청주시 제1선거구)은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기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생산품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생산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작년 대비 금년 현재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많은 홍보와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성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 발짝 더

충북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 역량강화로 일·가정 양립

지난 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충청북도는 지난 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30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과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 치 경 제 사 회 문 화 의 모든 영역에서 일 가 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7.1.~7.7.)으로, 이 기간에는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을 초청해 사회발전과 여성의 정 치 경 제 적 역량강화 란 주제로 새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 접근하기 쉽도록 강의가 진행됐다. 또 기념식에 앞서 물 절약, 에너지절약 캠페인 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유공자들에게 표창장도 수여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도, 시 군 여성단체 회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녀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편견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환기시켜 나가자 고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음성군 여성친화도시로 '재탄생'

군의회,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안전망 구축 등 조례제정

음성군의회는 13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기본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주요 정책 과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군은 도 로 공 원 녹 지 산 업 단 지 등을 조성할 때 장 애 인 임 산 부 노 인 아 동 등의 보행 편의와 일 가 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 아 동 여 성 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군민 모니터단 운영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30명 이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증평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증평, 행복마을 콘테스트 최우수

4년 연속 수 상 본선 출전

증평군은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행복마을 만들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모두가 함께 만드는 증평군의 행복마을 을 발표했다.

도내 최초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총괄부서 조직과 농촌활성화센터-중간지원조직 협약,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등이 발표문에 담겼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다음 달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에 도 대표로 출전한다.

군은 앞서 열린 본선 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하기도 했다.

도는 행복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 굴 확 산 을 위해 2014년부터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군은 여기서 시 군 마을가꾸기(2014년) 시 군 마을만들기와 마을 가꾸기(2015년) 함께 만드는 농촌운동 읍 면 및 마을(2016년)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북 미래는 일자리에 달렸다

중기청·청주 고용노동부 등 모여 정책 추진본부 구성

충청북도는 지난 6월 3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모색을 위해 관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자리정책 추진본부 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일자리정책 추진본부 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여 성 청 년 노인 장 애 인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일자리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여기에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충북연구원 등 일자리관련 5개 유관기관장이 외부전문가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본부는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도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21일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내용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전달하고, 일자리 100일 플랜 발표 후 충북도의 그간 추진 경과, 여 성 청 년 노 인 등 계층별 신규 발굴된 일자리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새 정부의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지역차원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동 협 력 대 응 으 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향후에도 지역고용전략 수립, 신규 일자리사업 아이템 발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주거취약계층 도와드려요"

주거 급여 대상 자 집 수 리 사업 등 지원서비스 홍보

청주시가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등에 대한 홍보 내용 등을 게재했고, 각 읍면동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각종 단체 회의 시 주거급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각 읍 면 사 무 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 득 재 산 확인을 거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이내로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2만 원 이하인 자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최대 임차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인 경우 집 수선 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역 주거급여 수혜자는 2017년 5월 기준 1만1841가구(인원1만7578명)가 매월 주거급여(임차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집수리사업)으로는 300여 가구에 대해 집수리 수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 주거급여 예산 133여억 원 원 중 6월말까지 68여억 원이 집행돼 주거급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돼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총 7935가구가 선정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 및 양질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옥천군-장애인부모연대 '맞손'

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

옥천군은 수탁자 선정을 통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지난 5일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여 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순수 군비로 운영되며 장애인 가족 상담지원, 장애인가족역량강화 등 조례에 명시된 7가지 사업과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옥천군은 이번 협약으로 군에 등록된 5035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의 기회와 상담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한명의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영동군 "더이상 복지 사각지대는 없어요"

지역사회보장협 활성화 협력사업 선 정 4950만원 확보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발판을 마련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한 2017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 관 협력사업 에 선정돼 총사업비 49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공모사업은 전국 읍 면 복지허브화 확산 운동과 읍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 관 협력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읍 면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330만 원의 예산으로 읍 면 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며 각 읍 면 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와 복지자원 정비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11개 읍 면 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420만 원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구호비와 해당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아 동 청 소 년 문화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찬배달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욕구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에 민 관 의 협력과 참여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군정 방침인 복지의 맞춤화 에 맞춰 행 재 정 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세복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민 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복지안전망 구축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공모사업에 선정, 1200만원을 지원받아 반찬나누러 마실가기 등의 특화사업과 긴급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읍면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심 의 보 편집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겸 주필 김 춘 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6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앤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품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증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충북한돈협회, 목원푸드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밥,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 홈플러스익스플러스,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복대점), 바누아투, 좋은아침(복대점), 뚜레쥬르(비하계룡점), 던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웰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비게트(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 영점, 뉴타운점, 율량칸타빌점, 율량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동,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태환베이커리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뚜레쥬르율량점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트쌍용점, 뚜레쥬르한라점, 뚜레쥬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홈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뚜레쥬르 금천장자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궁전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뚜레쥬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떡집, 유신찐빵,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뚜레쥬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덕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홈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에이치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램,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쥬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량점, 청주특판(주), 무외에뚜와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신식품, 좋은아침 율량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던킨도너츠 증평점, 델리퀸 증평점, 그린유통, GS25 증평대로점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또,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뚜레쥬르괴산점, 파리바게트괴산점, 매크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옥천군푸드뱅크
뚜레쥬르 엠마트점, 구가네 능이보감, 조마루 감자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타리클럽, (주)한일후드

영동나눔푸드뱅크
뚜레쥬르(김홍옥), (주)벧엘육가공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던킨도너츠(금왕), (주)이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뚜레쥬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찐빵, 김수향, 델리퀸(이월점), 에스앤푸드, 자혜식품, 명가떡집,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가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델리퀸충주교현점, 떡보의하루, 뚜레쥬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자미원에프앤지,충주청과,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청과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링게,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잎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피크림제천중앙점, 호수상사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 두승식품, 서울우유단양대리점, 빠리바게트 단양대리점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단양 '인구 3만 사수' 행정력 집중

군, 청년과 관련한 조례 제정 잇달아 추진

단양군이 청년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잇달아 추진하는 등 청년 잡기로 인구 3만 사수 에 사활을 걸었다.

10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담은 단양군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마련과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게 뼈대다.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고용 촉진 등의 대책도 수 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정책 발 굴 연 구 를 위한 청년희망센터 설치,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단양군은 앞서 지난 4월에는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 시 행 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단양에 거주하는 청년부부(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자)의 빠른 정착을 돕고 인구 증가와 지역 청년의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청년부부에게는 1회에 한해 100만원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희망일자리 페스티벌, 청년취업상담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는 청년이 미래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을 주제로 청년 마음잡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군립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와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전체 공급 가구의 절반을 특별 임대할 방침이다.

단양군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3만409명으로 인구 3만 붕괴 위기에 놓였고, 19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층 인구는 약 15 에 불과하다.

단양군 관계자는 청년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을 타개하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충주 북한이탈주민 '찾아가는 법률상담'

탈북주민들 권익 보호

충주시는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7일 찾아가는 법률상담 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높은 비용문제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에서 약자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로 법적 대응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과 연계해 법률상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연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법률상담에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이 찾아 주택 임대차계약 문제를 비롯해 국제결혼 관련 분쟁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 참여한 A(45)씨는 남한의 법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 그동안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할 지를 몰랐다 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많이 생겨 탈북주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탈북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상담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충북도 무사안일·부서이기주의 행정 반성해야"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이 지난 14일 제357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 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원 영구임대주택지원조례 3년째 낮잠 비난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더민주, 청주3)은 14일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제357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12월 충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도의 조례 집행 의지는 찾아 보기 어렵다 며 충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맹 비난했다.

장 의원은 올해 초까지도 복지정책과와 건축문화과는 조례 담당이 자신들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면서 세월을 보냈다 며 심지어 주거복지 상담사,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부문별 추진상황을 질문해도 해당 부서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째인 지금 조례에 수립하도록 규정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아직도 무사안일주의, 부서이기주의가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성찰해 봐야 한다 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하루 속히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6139세대 8903명이 거주하고 있다.

6월 충북 청년실업률 전국 최저 수준

6% 평균 보다 4.4%P 낮아

2017년 6월 기준 충북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7월 12일 통계청(국가통계포털)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7년 충북 청년(15세~29세)층 실업률은 6.0%로 전국 평균 10.4%대비 4.4%포인트 낮았으며, 전년도(7.0%)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6월 기준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10.4%로 전년도 10.3%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실업률이 하락한 시 도 는 강원(3.0%), 제주(2.7%), 광주(2.7%), 전북(2.0%), 대구(1.8%), 울산(1.5%), 충북(1.0%), 인천(0.1%), 충남(0.1%)으로, 그 외 시 도 는 실업률이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가 4.7%로 가장 낮았고, 충북 6.0%, 강원 6.4%, 광주 8.4%, 울산 8.9%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충북 청년 고용률은 45.7%로 전국 평균 43.0% 대비 2.7%포인트 높았으며, 전년도(43.0%)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옥천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옥천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17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를 마무리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세대 719가구의 1014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급여 감소는 139가구(163건), 중지는 141가구(205건)로 전체 조사 가구 대비 38%, 건수 대비 36%에 해당된다.

조사 기간 중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본인이 소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자료제공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최종 반영됐다.

조사결과 보장이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를 통해 생활안정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장애 등의 후속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거주지나 소득재산이 변동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는 수급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의 소 득 재산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해 수급자격이나 급여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경숙 통합조사팀장은 옥천군은 지난해에도 기간 내 100% 조사 완료해 도내 시군종합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 상 담 신 청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사 무 소 및 옥천군 주민복지과(043-730-3351~5)로 하면 된다.

진천군-대원제약-노인회-상의 취약계층 보청기 지원 업무 협약

진천군과 대원제약(주)(대표 김재호),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회장 노태근),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양근식)는 5일 취약계층 보청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천군 광혜원 제2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대원제약(주)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상당의 보청기 100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원제약(주)는 이번 취약계층 보청기 지원뿐만 아니라 사랑의 김장나누기, 정기연주회 개최 모금액 기부와 각종 나눔 콘서트, 환우 위문공연과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눔 경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대원제약의 취약계층 보청기 지원에 감사드리며, 광혜원 제2농공단지의 빠른 준공과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

제천지역 교육복지 초·중등 공동사업

제천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A형학교(교육복지사 배치교)인 장락초, 제천중, 제천동중 3개교가 15일 안동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월영교에서 6학년~중2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늘해랑 멘토링 2회기를 실시했다.

이번 2회기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배려심, 협동심, 사고력, 사회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안동 유교랜드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과 놀이를 접목해 유교를 배우고, 온뜨레피움에서는 열대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늘해랑 멘토링은 늘 해처럼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라는 의미로 학교적응력향상과 또래선·후배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줘 학생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중학생 선배가 멘토가 되고, 초등학생 후배가 멘티가 돼 4회기에 걸쳐 집단상담,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멘토링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양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시행

단양군은 임신과 출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전기가스요금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을 지원했다.

오는 31일부터는 서비스가 확대돼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모든 출산 가구에 대해 전기료가 경감된다.

단 1년간 전기요금의 30% 할인 적용을 받아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해 신청할 경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했던 복잡 다양했던 서류도 담당 공무원의 전산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끔 간소화 된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하지?
아!
충북복지넷
- 복지서비스 검색
- 가까운 복지기관 찾기
- 복지기관 평가정보까지 한눈에
충북복지넷
www.043w.or.kr
검색창에 충북복지넷을 검색해보세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한국 직장여성 '일 할 맛 안난다'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비중 OECD 1위 '불명예'

지난해 37.20%기록… 2위 미국보다 7.79% 높아

우리나라 직장여성 중 저임금 여성 비중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라는 불명예 를 벗지 못했다.

한국에서 저임금을 받는 여성 비중은 2위보다 무려 8%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3일 OECD에 따르면 2015년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60%로 1년 전(37.80%)보다 0.2%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OECD 비교 가능한 16개국 중에선 한국이 1위였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비중은 2위 미국(29.81%)보다도 7.79%포인트 높았다. 최하위권인 핀란드(10.35%), 덴마크(11.35%)는 한국의 ⅓ 수준도 되지 않았다.

OECD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중위 임금)보다 ⅔ 미만을 받으면 저임금으로 본다.

한국은 여성 저임금으로 따지면 OECD에서 독보적 이다. 2000년 45.77%이던 이 비중은 2010년 40.45%로 40%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38.21%로 떨어지는 등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개선 속도가 느리고 다른 국가보다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아 여성 저임금 부문에서 2000년대 내내 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위는 이스라엘, 일본, 미국, 아일랜드가 돌아가며 차지했다. 한국과 2위 국가와의 격차도 10%포인트 안팎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양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은 37.20%다.

아직 한국을 포함해 4개국밖에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2위 미국(29.45%)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데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 수치 자체도 여전히 높아 지난해에도 한국이 1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이 높은 것은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점, 임금 차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고 저임금이 예상되는 여성들이 더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나온다 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이 고학력, 고임금 가능성이 큰데,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다. 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고용률이 높은 다른 국가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 돌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고학력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남아 있어도 유사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보다 80%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고 장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여성 저임금 비중을 개선하려면 일 가정 양립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면 그 기간에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며 시간제 근로자를 뽑을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단위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일시단축 청구권 제도 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고 제언했다.

2015년 기준으로 남녀 통틀어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23.50%로 콜롬비아(25.27%),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4위였다. 남성 저임금 비율은 15.20%로 OECD 9위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연간 16만명 혜택

복지부 연간 2837억원 투 입 2018년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 지원대상을 전 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면 연간 1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1만6000명 가량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6월 30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 국민 모든 질환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지원대상은 지금보다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837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원금액은 520억원 가량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지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애초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속 시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재원 조달방식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3년5개월간(2013년 8월~2016년 12월)의 이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5만8567명이며, 지원금액은 1760억3300만원이었다.

경제성장율 인구 고령화로 10년 후엔 '0%'

한은 연구원, 보고서 발 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높여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년 후에는 0%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기호 육승환 연구위원은 6일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 인구추계를 토대로 기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 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 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 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에 인구증가율 하락이 가세하면서 성장률이 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에서 노동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비감소 폭이 선진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13.8%나 되고 내년에는 고령사회 (고령인구가 14%를 넘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 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 경제성장률의 하락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시나리오보다 0.4% 포인트 높아지고 그 후 10년 동안 0.2%p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도 성장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비슷한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0.4 0.8%p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제시한 보고서도 내놨다.

박경훈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이라는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 완화, 일 가정의 양립 등 가족복지정책이 긴요하다 고 지적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 및 양육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남녀 불평등도 출산율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0.047%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1% 상승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부터 난임시술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검사비 마취비 등 비용부담 낮춰 저출산 대책 환경 조성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0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 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이 제한됐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국내 난임 환자는 해마다 20여만명에 이르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약 40%가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지급 보육수당 970억원 넘어… '혈세 낭비'

정부, 어린이집유치원 안다니는 아이에게도 5년간 잘못 지급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주는 양육수당이 해외 체류 사망 아동에게도 최근 5년간 970억원가량 부당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 2017년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627명에게 973억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잘못 줬다.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서울 강남구가 31억2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7억3385만원), 송파구(27억2095만원), 강서구(15억8410만원), 동작구(14억943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5년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 양육수당(7590만원)을 지급하는 오류도 범했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한다 며 복지부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 결 8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 재산조사를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신청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나눌수록 행복해 집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참여해 주세요!

1. 봉사단 모집대상
- 1004지역사회봉사단 :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나 동아리(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 베이비부머봉사단 : 1955~19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월 2회 이상 활동 가능)

2. 봉사단 기준
- 5인 이상(VMS 가입)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 · 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 · 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 · 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 · 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 ·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 · 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 · 학습	나눔 · 경제교육,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 · 행정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 · 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지역사회봉사단 목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증진
- 전문봉사인력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 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성 · 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 패러다임 구축

5. 봉사단 혜택
- 활동비(재료비 및 필요물품 구입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 봉사단체 홍보

6.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남형우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노인종합복지관 대통령 표창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년 6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서
광역상담센터 · 돌봄은행 등 고령화 대응 공로 인정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의보)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한 2017년 제6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진행된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인구의 날 제정 의미를 함께 나누고 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 령 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이 날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고령화 대응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퇴근 정보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발맞추어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반찬도시락 나눔 사 업 통해 청주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 이면서접촉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역상담센터, 재활센터, 파피봉세대를 위한 인생이모 작지원센터, 돌봄은행, 여가문화화 산프로그램, 노인사회참여활성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항상에 기여

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심의보 관장은 앞으로도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및 보급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음악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과 발맞 맞추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의 노인분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노인복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복부종합사회복지관 먹거리 나눔

6월 29일 복부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사회복지 기관 시설등 실무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청 주시 청원구 사뜨레기 네트워크 상반기 먹거리 나눔 전달식 을 진행하였다.

이번 상반기 먹거리 나눔은 민관 기관들의 추천을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라면, 달란 한통 주 부식 품을 전달함으로써 결식 및 중복을 예방하고 지역 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참석한 네트워크 대표기관 복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한정희 관 은 이번 상반기 먹거리 나눔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위기상황 극복에 힘쓴 단 식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 업이며, 앞으로도 사례관리기관들 의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원청 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 정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노동조합 급식재공

6월 29일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임원진은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감비탕을 지원했다.

또한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임원진은 같비탕 나눔 뿐만아니라 복지관 관 이것저것을 즐고 덕으며 어르신들이 활발한 환경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임원진은 매년 계절이 바뀔때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나눔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정신건강센터 '몸과 마음 두드림' 운영

정신장애인 대상 신 체 정 신 건강 회복 숲체험교육사업

청주정신건강센터(관장 김대환)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3.4부터 5년 연속 복권기금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숲체험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숲체험교육사업에 총 3,361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복권기금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체험교육사업 - 몸과 마음 두드림[Ⅳ] 을 연간 1,0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몸과 마음 두드림[Ⅳ]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심신의 긴장완화와 산림활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 및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숲 트레킹, 숲명상, 자연교감, 자연물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자연에서의 힐링 프로그램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숲체험교육사업에 참여한 박모씨는 자연에서 동료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을 느낀다며 담당한 업무의 활력소가 되는 정신장애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국악극 '덕세청춘' 한마당
대청댐호내놀복지센터서 공연

K-water 대청댐관리단(단장 정의택)에서 운영하는 대청댐호내놀복지센터(센터장 오재근)에서는 6월 22일 복지센터 문화교실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문화소외 지역과 계층을 다음으로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2017 찾아가는 문화활동 의 일환으로 대청댐 호내놀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루어졌다.

공연은 어르신을 100여분을 모시고 전통예술단 소나무각장 한하수의 국악극 '백세충촌 이 펼쳐졌다.

한하수 단장은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함께한 공연이라 더욱 공연도 다 더욱 빠졌한 공연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아 공연 내내 떠나지 않아 너무 감동이 있었다.

특히, 입체 처하 시절에 태어나 모진 고생을 다하며 살아오신 을 얻마들의 이야기는 계동의 세월을 삶아온 어르신들의 공감을 이끌며 남수는 주제로 어르신들에게 더 깊은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오에근 센터장은 봄소 분화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국악극을 즐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며, 이번 공연을 어르신에게 더욱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어서 좋았다. 고 전했다.

사랑의 보금자리 '뚝딱뚝딱'

롯데백화점 롯데복지재단 위탁기장 공동시설 봉사활동

무더운 여름,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위탁기장 두 가구에 희망을이 비었다.

7일 충북기장위탁지원센터의 후원과 롯데백화점롯데복지재단의 후원을 통해 청주시 거주하는 위탁아동 박근(14)씨과 재일(16)씨의 가정이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모습을 보고 행고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대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롯데백화점롯데복지재단은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박근, 재일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주거환경개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환경 내부 보수를 진행하였다.

내부보수와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천기 공사 등 전체적인 수리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의류,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행복한 바람을 불게 하였다.

이처럼 롯데백화점롯데복지재단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의 보금자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수리를 마쳤 수 있었다.

한편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세이브칠드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북기장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3년 개소한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 받 답 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발굴, 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LX 청주서부지사 '온정의 손길'

베다니던기보호시설에 후원금
발달장애인 교육비 등으로 활용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주서부지사지사장 김기선)는 11일 장애인시설인 베다니던기보호시설에 후원금 1백만원을 전달하였다.

베다니던기보호시설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 거 일 상 생 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기주시설이다. 전달된 후원금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비 및 주 부 식 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금은 한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가 나눔을 실천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된 급 100만원 전액을 함하여 기부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 전적 나눔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베다니던기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충북발달장애인센터 업무협약
한국피폐자지원협회 충북지부 등과 장애인권리보장 맞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홍용성)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전찬근,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관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한국피폐자지원협회 충북지부(지부장 최종이), 충북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종순) 및 산하기관과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각 각 6월 29일, 7월 11일에 체결했다.

충북발달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충북지역 와 1만 여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법적 피해 도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상담 등 서비스 연계 및 협업 발달 장애인 권익증호 사업 발굴 시 즉각적인 연계 발달 장애인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정보 등 공유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2월 개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권익 교육,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관한 평생계획,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 대상 법률 발생 시 원장조사, 형사사법 절차지원, 보호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나갈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 절차를 조력하고 지원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 복지사업 평가 중부권 워크숍

사회참여 동아리 프로그램 발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관장 이경근)에서는 6월 20일 복지관 강당에서 2017 복지사업 평가수렴 중부권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중부권기관(청주사회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이 연합으로 실시하는 평가수렴 워크숍은 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지사업 평가수렴 워크숍은 이 틴이재단 중부권 4개 기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수렴과 평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주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식 향상을 위한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프로그램(청 소 기 _청소년 소통을 기대하다)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 이어 워크숍에 참가한 사회복지사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이어 자문교수의 수레비전으로 진행되었다.

청주사회복지관은 평가수렴 워크숍 실시를 통해 복지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진천정신건강가족협회 나눔농장서 감자 수확

6월 29일 진천군 정신건강 가족협회(회장 사신실)은 진천군 진통시장 내 나눔 농장에서 참신건강증진센터 직장재활 회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모여 봄부터 공동으로 재배한 감자를 수확하여 회원과 가족, 자원봉사자는 물론 홀스 함급 후원마니 현물 후원을 하는 후원자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며 즐거움을 더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2시간 여가량 감자캐기가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는 도움이나 후원을 받기만 하는 정신 장애인에게는 베우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었다.

자은 나눔이지만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주)신장푸드는 이날 참석자 모두에게 맛있는 점심식사와 수박, 음료 등을 제공했다.

사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 방안

1.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증현상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복잡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배출시설, 요양보호사 등을 민간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크고작은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양질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제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시설내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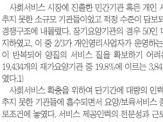
2. 사회서비스 공급체제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종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표 1-1] 사업체 500명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 노인요양서비스, 그리고 복지관서비스의 공급능력, 품질 및 비용부담에 대한 설문조사(2016. 9. 중순)

분야	질문항목	구분	공급자 이해	전혀	매우	합계	긍정 비율(%)
보육	시설 공급을 충분히	민간시설	전체	327	100	5.8	23.9	56.3
		국공립 시설	전체	113	100	2.7	23.9	70.8
	이용자 부담금을 적정히	민간시설	전체	113	100	3.7	46.0	16.8
		국공립 시설	전체	113	100	2.7	46.0	18.6
	서비스 품질이 적정히	민간시설	전체	113	100	41.6	52.2	6.2
		국공립 시설	전체	113	100	8.8	52.2	39.0
노인 요양	시설 공급을 충분히	민간시설	전체	500	100	8.6	33.0	46.4
		국공립 시설	전체	500	100	1.8	33.0	65.2
	이용자 부담금을 적정히	사설요양시설(주 운영)	전체	37	100	37.8	45.9	13.5
		재가요양센터(주 운영)	전체	16	100	18.8	56.0	25.0
	서비스 품질이 적정히	사설요양시설(주 운영)	전체	37	100	32.4	45.9	21.6
		재가요양센터(주 운영)	전체	16	100	56.0	31.3	18.8
사회 복지관	시설 공급을 충분히	민간시설	전체	100	100	8.4	40.8	41.4
		국공립 시설	전체	100	100	1.7	55.0	43.7
	이용자 부담금을 적정히	무료이용 지역	전체	60	100	1.7	55.0	43.7
	서비스 품질이 적정히	무료이용 지역	전체	60	100	51.7	46.0	6.3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현황" 각 해당년 통계, 각 년도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본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3만을 경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7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으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006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으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대구조 재편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인프라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의 급팽창된 반면 현재보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1,620개으로 6.18% 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31.4%(16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이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중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표 1-2] 보육서비스 평가제 시설수 및 이용 아동 수 현황(2015)

계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민간개방 · 단체 등 보육시설	민간개방 · 단체 등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42,517	2,629	1,414	15,480	834	14,626	22,774	155	785
100.0%	6.18	3.33	36.36	1.96	34.40	53.52	0.36	1.85

구분	아동 이용 수			
	계	국 · 공립	국 · 공립 외	국 · 공립 보육시설 아동 이용 비율(%)
전국	1,662,803	165,743	1,297,070	11.4
서울시	238,103	62,558	175,547	26.3

* 자료: 보건복지부(2016)에서 재구성

국공립 2030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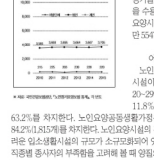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2007년 이전에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1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

[표 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영주체별 현황(2015)

운영주체	전체합계			시설			재가방문기관		
	기관	비율	정원	기관	비율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18,002	100	200,443	5,085	28.2	193,369	2,936	140,788	2,150	16,580
지방자치단체	205	1.2	9,652	115	2.2	7,667	99	7,544	12	101
법인	3,765	20.8	92,929	1,431	27.9	76,201	1,190	74,336	239	1,999
개인	13,995	77.7	97,906	3,540	69.6	75,354	1,638	58,944	1,902	16,447
기타	82	0.5	694	13	0.3	409	8	365	5	44

운영주체	소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기관	비율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지방자치단체	1,930	25.8	42,025	10,077	6,253	574	2,099	28,270	299	2,805	1,700
법인	2,264	30.3	17,2	90,993	1,529	157	816	16,436	57	474	229
개인	3,287	44.0	38,9	21,705	6,468	7,065	456	1,095	20,443	230	2,282	1,485
기타	693	9.3	2,5	275	54	39	6	13	365	2	14	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재구성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각 년도

비율은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인 민간 시설환경의 열악함이나 학대 · 폭력문제 등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시설 수(2014년)

주체	설립 보육수 수	운영 보육수 수
전체	9,997 (46.2%)	9,767 (45%)
도시주민조합	3	2
사업자단체	9,980	9,908
기타	4	4
개인	14,622 (53.7%)	15,197 (55%)
사회복지법인	13,615	13,141
학교 · 공익법인 등	167	98
협동조합	650	723
기타단체	1,107	1,133
개인	145	102
합계	24,559 (100%)	24,559 (100%)

보육시설의 원장교사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4,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명 이하 시설에서 가장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절반 50~16개 시설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1-5] 노인보호사별 상태 및 운영 시설 수(2015년)

주체	시설 수 수	운영 시설 수
전체	402 (6.9%)	969 (21.7%)
도시주민	50	2
사업자단체	254	69
생활협동 · 장기사업조합	98	69
단체	6,360 (94.1%)	6,864 (91.7%)
장애인단체	7	7
사회복지법인	6,345	6,345
기타	9	1
합계	6,764 (100%)	6,764 (100%)

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은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영리으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이는 비영리 법인이 어린이집으로 회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2017. 1.05 환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리파크 예산을 지출하도록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하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외국의 사례에 비해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경영지원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신일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만만 개로 이 중 보건일 및 사회서스 산업 이 15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만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률 은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만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절 반만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일자리 창출력이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편 일 이내에 시장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이상의 집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만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4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한 보험료양보호사가 3,418만 가 시설근무자는 5,998만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요양보호사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성동일단 수준이나 높은 시설인 9,362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가는 과정 변동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 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위수탁형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 달성복지재단 ,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보다 시설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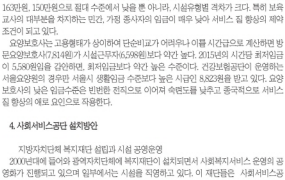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기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기금을 공급받으면서 복지시설 확충에 부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제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해당 포함에 부자하고 늘어나는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공무직지원해로 가칭 사회서스공단 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으로부터 이격 수준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인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이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보장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폭 확충 시장을 진행하여 2012~2016년까지 2967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해마다도 의 30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3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중추가 코고 공단 및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심화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힘든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공공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하여야 한다.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과 민간기관에 보급하여 인간지원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1-6] 2016년 서울시의 공공보육시설 확충 을 인한 공공전환 비율

총계	민간 시설	공공 시설	민간 시설		가정 시설		가정 시설	
			유닛	전환율	유닛	전환율	유닛	전환율
3000개소	1	19	45	10	23	52	12	52.2
비율(%)	0.3	6.3	15.0	3.3	7.8	17.3	4.0	34.4
1,636(54.6)	0.7	14.3	10.1	22.4	49.2	40.4	9.6	69.2
개선된 노인복	0.7	7.9	2.4	2.9	11.9	6.0	2.7	1.9

*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사회서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일자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사회서비스 시설 공급관리센터 기능 강화의 구조를 정착하고, 공단 주도의 품질의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기업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과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정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야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되고,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절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7면에 계속

공적 책임 강화 '찬성' vs 재정 누수 야기 '반대'

▶ 6면에 이어

6. 결론과 남은 정책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끄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기관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미식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한다.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공공복지지재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나쁘지을 보이는 한다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단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큰 변일한 리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경로에에 힘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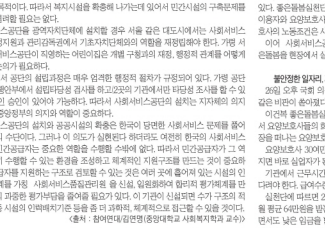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본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기본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요모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의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한나의 어단이다. 그러나 이 외도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기관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면,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이 출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동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 을 신설, 입원원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종 더 크하적, 체계적으로 점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참여연대(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칭 OO시(도) '사회서비스공단' 조직도 예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한 우키지 논점

<찬성의견>

분단해당 인 하 근로조건 개선 환영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놓고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도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적극 책임진다는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우선 노인의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시설에 맡겨져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일반 시민들 역시 공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명 중 절반이상(65%)이 서비스공단에서 시설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고용하는 데에 찬성했다.

이 중 절반 이상(51.2%)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65.4%),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66.8%)도 높았다.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5년경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90.8%에 달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6%이고,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직접고용 함으로 종전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응답이 88%였다.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이 국회를 여만이었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표준운영모델과 표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과잉경쟁과 중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며,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단이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이며 예합을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서비스 질을 비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요양기관을 확산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좋은돌봄실천단 관계자는 정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은 요양서비스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의 시설기 에 기관은 운영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좋은돌봄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으로 요양보호사들 떠나

20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진면개혁 토론회 에서 이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경혜 좋은돌봄실천단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장원리 과도한 경쟁구조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근근이 버텨 왔다 며 불안정한 일자리와 적은 임금으로 돈잘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들이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300만명의 96%가 재가요양보호사. 재가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어 지면 바로 실업자가 된다.

기관에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이용자가 생길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급여수준도 매우 낮다.

실천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시설요양보호사는 월 평균 115만원, 재가요양보호사는 월 평균 64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건혁 대표는 시설요양보호사는 건 시간 일하면 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재가요양보호사는 시간제로 일하며 낮은 임금을 받는다 고 설명했다.

한 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한 요양보호사는 찰수보기 힘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위원회가 자성한 장기요양기관 원봉종사자 퇴사 현황 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년 미만 퇴직 비율이 71~76%나 됐다.

1~2년 국면은 12~17%, 2~3년 국면은 4~6%였다. 이 대표는 한 기관에서 업자리가 보장되지 않아 수록 일하기 어려서 일하기 어렵에 각 기관에서 일하는 총량은 많지만 한 기관에서 근무연수 1년을 채우기 어렵다 며 퇴직금도 없다 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재가서비스 인력 직접고용해야

장차는 제도 도입 당시 장기요양서비스를 민간제공기관에 맡겨 기관 간 서비스 질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공급기관이 무한경쟁을 펼 , 장기요양인력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수록 커졌다.

나빈한 민간기관을 규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진입단계 규제를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인증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온 이유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장기요양정책의 초점을 자유로운 진입과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두지 말고 안전하고 보증할 만한 서비스 제공기관들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며 이용자들이 어떤 기관을 선택하든 안전하고 보증될 만한 기관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제공기관을 끌라서 안전하고 보증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대안으로 좋 은 서비스 좋 은 일자리 지속 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공공공급자 비중을 기준수 기준으로 30%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가서비스 인력의 40% 정도를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대 효과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시 기대 효과
시민	• 공공시설에 대한 선호 및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는	• 공공성과, 공공공급시설에 대한 믹구 적소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보로 정부 서비스 질 제고
국가	• 소규모기관의 경쟁 경쟁으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기반 부족 • 사회서비스 등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 고도의 경제를 갖춘 시장 중간/경제로 과 상당영역 구조의 유지 • 공인수속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고서비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및 표준모델 인한기관의 서비스제공 역량강화
종사자	•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근로조건 • 근로의욕 상실로 인한 잦은 이직	•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 향상 • 공인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정성 증가하여 근로 의욕 고취(속한 인력 확보)
서비스 기관	• 공도한 경쟁으로 인한 종질상 어려움(서비스 부실유발의 부여) • 서비스질의 체계적 관리 어려움	• 지역인력 내에 사설공급인 참여적 조정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성 강화 • 공인으로부터 표준서비스모델 제공 받음
일자리	• 사회서비스의 직종을 찾아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어설(낮은 직업선호도)	• 직업상담원 일급고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안정의 일자리 창출(장기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반대의견>

우려의 시선 보육계 아 당 은 반대

보육계의 반응은 각각다.

전국의 아 동 보 육 관련 1.3개 회원가 중심이 된 전국어동보육학회연대 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직종 편입계획안 전면 반대 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기장은 더 이상 두 보육아교육 부처 둘원 이다.

이날 서명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2년 가까이 우 보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 보육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공단이 보육을 흡수해 버리면 어린이집은 교육, 유치원은 교육 이런 이분법적 구분이 고착화된다 고 꼬집었다.

보육을 관할하는 부처가 보육의 정책성을 정확하게 담보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육은 시설복지 영역 유아 교육 은 교육부지 영역으로 각기 구별되는 정책 설이 부여됐고 이원단원 성격의 보육시설에 대한 구조는 폐지의 지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핵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감도 있다.

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업사자들과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 시도를 보기하라 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설립해 현행 사회서비스 신설을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 운영방식 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 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의 종사자 자격 및 보수체계, 재원 형태 등의 다양하고, 수반되는 제정재단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복지서비스 시설의 질서를 기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이 만약 복지부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서비스공단을 강행할 경우 2천2백만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공리의 맞설 것 이라고 맛설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계획은 현 국가채정 형편상 실현 불가능

정기요양보험민간협회 민간정기요양기관총연합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대한정기요양원협회 등의 단체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화를 빌미로 무리 에산을 지출하여 현행 민간서비스기관의 사업을 침탈하려 무나한 공공화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났다 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단호로 여개도 민간시장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정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부정행위나 반규 위반행위에 불과함에도 마치 전 사회서비스시스 기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포장한 것으로 대국민 여론조작 사기 행각 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객속해서 또한 민간이 수행한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민간과 공익법인의 태생적 출발이 다름을 무시한 천년대하인 단순비교에 불과하다 면서 민간기관은 공익법인 같은 비영리로 취급하여 재무회계구조의 적용을 강제하고자 하면 공익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설설립 비용이나 기능보강비,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을 민간기관에게 제도 동일하게 지급한 후 서비스 질을 논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연관되어 핵심논의 대상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다양한 종사자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만을 명분으로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 뿐 요양 보호사에게 이전하고 공단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야기하는 제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공공화 인력에 대한 시스템의 분재점의 정확한 진단 후 공익과 민간의 의정을 제대로 살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러한 근거로 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로 여개협의 한다로 이 같이 드러난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 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대상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업무와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 · 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원칙인 변호사 1명무무 언관구조하기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9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종합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 최악의 물난리 속 수해복구 '한마음 한뜻'

호우피해 이곳으로 전화하세요!

충청북도는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피해 분야별 민원처리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연번	관련실과	피 해 내 용	전화번호
1	자수방재과	호우피해 보고(총괄)	043)220-2463, 2461~5
2	재난관리과	수상레저 피해현황	043)220-2423
3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 투입 상황	043)220-2042
4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 대책상황	043)220-3012
5	보건정책과	방역조치 및 할동계획	043)220-3143
6	경제정책과	전기, 도시가스 공급 현황	043)220-3254
7	일자리기업과	중소기업 수해발생 및 복구상황	043)220-3372
8	유기농산과	농작물 피해상황 보고(3반)	043)220-3633
9	축산과	축산 피해 보고	043)220-3715
10	산림녹지과	산사태 상황보고	043)220-3793
11	문화예술과	문화재 피해보고	043)220-3933
12	건축문화과	주택피해 보고	043)220-4482
13	도로과	도로피해 상황보고	043)220-4234
14	교통물류과	대중교통 피해 및 복구현황	043)220-4252
15	환경정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점수	043)220-4033
16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내 관련 시설	043)220-3335
17	수질관리과	상하수도시설 피해	043)220-4004, 4093
18	소방본부	소방활동 상황(인명구조, 수색상황)	043)220-4853
19	자수방재과	하천 피해 상황보고	043)220-2485
20	광할법인과	소하오 공공시설(농로, 교량, 석축 등) 피해상황 보고	043)220-4144
21	제육진흥과	체육시설 피해상황 보고	043)220-3884
22	여성정책관	미래여성플라자 피해상황보고	043)220-3914

무더위 속 구슬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협의회)가 27일 오송 전주페이퍼 공장일대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심의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협의회 소속 연합봉사단(회장 심재훈) 임원 20여명이 함께 오송 전주페이퍼 공장 일대 하우스 수해복구 작업을 약 4~5시간 가량 수행했다.

수해지 찾은 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는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지역 옥산면 사회복지시설 청해원 을 찾아 수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운 가운데 시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4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해 침수 지역 인근에서 쓸려온 쓰레기를 치우고 토사를 제거하며 복구 작업에 정성을 다했다. 이날 제천시의회 김점문 의장은 "오랜 장마로 사각지대에 놓인 시회복지시설을 지원 장소로 선정해 뜻밖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시설적원들을 위로하며 소정의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43000여명의 도움의 손길 청주를 비롯해 충북 도내 복구작업에 전국 자원봉사자 430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간 11000여명 힘보태 18일에는 전국의 12개 적십자사의 봉사원 7009명이 청주시 상당구 풀오동, 상당구 미원면, 상당구 남성면, 청원구 율량동, 상당구 기덕면,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복대동, 과산군 청천면등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또한, 19일에는 경기지사 및 광주 전남지사와 충북지사 그리고 적십자 혈장분획센터 직원등 약 3000명의 봉사원들이 미원면과 청천면 그리고 청원구 내덕1동 등에서 복구작업 및 세탁봉사등을 진행 하였다.

지역사회복지단

사랑나눔봉사단 재능기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협의회) 소속 사랑나눔단장 전형택봉사단은 6월 22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덕일아파트 경로당에서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랑나눔봉사단은 공연 전 어르신들의 원심을 지킬 만들어 대접했다. 식사 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시원한 바람같은 쥔재였다.

사랑나눔 천택복 단장은 "매은 여름에 봉사단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고 어르신들이 공연이 좋아하주셔서 뿌듯하다. 라고 전했다.

사랑나눔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오선교 회장(67 ㎡) 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회장)이 5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7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오 회장은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개발과 건설감리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오 회장은 선엔사무소 선엔지니어링 을 전국 규모의 설계, 감리회사로 성장시켰다.

건설감리공제조합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지낸 오 회장은 조합경영의 내실화, 감리제도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8 2010년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한중 감리협회와 교류 등 대외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했다.

특히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충북대 등에 학교발전기금 2억4천만 원을 후원했다.

개인과 법인 기부금을 포함해 14억원을 쾌척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아까니에서 3년전 폼아가시고 폼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죽으면 내 전재산 12억원을 형에게 주겠다 고하시며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상속재산을 한푼도 블러바을 수 없나요?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형에게 전부 상속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일부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므로 민법에서 자신의 유류분권리의 상속재산을 수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재재 손으로 손위가 장해입니다.

이 사람들의 유류분을은 각각 법정상속분 1/2. 법정상속분 1/3, 법정상속분 1/4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권리자와 함께 권리를 함께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피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법정상속분인 6억원의 1/2인 3억원이 될 것입니다.

인사동정

오선교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복 / 지 / 만 / 평

적정성장

이창신 www.bokmani.com